

무주 교통사각지대 건축허가 '반발'

설천 청량리 진평마을 주민들, "입구 삼거리 사고 빈발지역" ... 군, "적법 허가, 대책마련"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진평마을 입구 삼거리에 신축되는 제2종 그린생활시설(72㎡ 1층)에 대한 건물 건축허가를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은 설천면 하천도로와 반디랜드에서 태권도공원으로 가는 직선 국도가 만나는 지역이며, 진평마을 진입로 앞 삼거리 지역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물론 지역주민 7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가 빈발한 사각지대로 사무소 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교통사고 사각지대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은 아무런 대책 없이 신축건물 허가로 태권도공원에서 반디랜드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와 설천면 우회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교통사고 유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지역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 교통 사각지대에 건축허가가 왜 말이나! 무주군청은 각성하고 건축허가 취소하라! 무주군청은 십수년 통행한 도로 위에 건축허가가 왜 말이나! 안전한 차량통행과 주민안전에 즉각 보호할 책임을 져야한다"고 도로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어 주민들은 "교통사고 사각지대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진평마을 입구 삼거리에 신축되는 제2종 그린생활시설에 대한 건물 건축허가를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무주군은 당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 모씨는 "군에서 토지매입 후 이곳에 조형물이나 사계절 꽃밭을

조성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국 이장은 "아무리 사유지라도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건축물을 대책 없이 허가해준 군 관계자와 자투리땅을 투기목적으로 매입해 분쟁을 촉발한 건축주를 강력규탄하며 주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표명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겠다"면서 "교통사고 유발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평마을 주민 40명은 건축허가 반대에 서명하고 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 세월호 남문농성장 '역사 속으로'

세월호 참사 아픔을 함께해 온 전주 세월호 남문농성장이 지난 2일 역할을 마치고 모습을 감췄다.

4일 남문농성장을 가장 오래도록 지켜온 시민사회단체인 평화주민사랑방은 1199일을 이어온 농성장을 접었다고 밝혔다.

농성장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 남문농성장 지킴이들의 의견이다. 남문농성장은 세월호 참사 120일째인 지난 2014년 8월22일 전주 종남문 광장에 설치됐다.

당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유인아빠 김영오씨와 함께 릴레이 단식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이후 전주 종남문 광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과 함께 세월호 추모장소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농성장 지킴이들은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대표'나 '위원' 같은 이름 없이 '지킴이'로 활동했다.

이들은 시내 곳곳에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고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액자형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목외광고물 규정을 어긴 현수막임에도 전주시민의 뜻이 담겼다는 의미에서 철거되지 않았다. 세월호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마음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삼민 기자

전주시의회 도건위, 현안사업 현장활동

교통관제시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하 의원)가 4일 교통정보센터 교통관제시설과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감시하고 돌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관제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인 전주교통정보센터를 방문

해 교통흐름관제실, 전산실 등을 둘러보고 교통신호등 시설물 및 버스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통합제어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또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로 정비, 펌프 및 유수지 설치 등 공사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은 "노후화된 기반 시설물들을 정비하여 재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구속되고도 급여 받은 사립고 이사장 아들 집행유예

'도내 한 사립학교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학교 이사장의 아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운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살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서류를 꾸며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사기 등)로 기소된 모 사립고교 이사장 아들인 유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 유모(76)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교장 서모(63)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됐음에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에게 질병휴직 처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교장 서씨 등은 유씨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의 명의로 병가 및 질병휴직 서류를 만든 뒤 이 사안이 이사회에서 처리된 것

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전북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정관 규정에 의해 퇴직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전북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과 이 학교 정관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급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학교 이사장 아들 유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서씨와 교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구속 사실을 은폐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씨가 구속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삼민 기자

훈김 나는 '전주형 주거복지' 선도적 모범사례로

주거복지사업 우수기관 대통령상... 주거약자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후 사업전개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주거복지사업 우수기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권을 보장하는 최고도시가 됐음을 의미한다.

시는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 수급관리 등 주택 중심의 정책이 아닌 '주거'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패러다임을 빨리 바꾸어 전환하고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시는 기존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주거복지사업 기본계획부터 사업의 구체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면 개정을 실시했다. 그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통합 컨트롤 전담부서인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LH전북 지역분부를 포함한 25개 단체와 협약을 맺는 등 민·관 협력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시는 또, 전주시주거종합계획인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다음 달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체계적인 주거복지 정책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 생활양식의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 변화에 발 맞춰 본격화 됐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경제조직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한 후 취약계층이 지불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주택을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으로, 세입자의 집값 격차와 이사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시는 올 한 해 5억원

을 들여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임대부 건물2동을 매입했다. 코하우징(Cooperative-Housing) 10가구를 노인, 청년, 신혼부부에게, 기존 시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셰어하우스(Share-Housing) 6가구를 청년들에게 내년 상반기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은 현재 3만8,835가구 414억9,600만원에 달한다. 또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모금액자를 잃을 처지에 있던 부도임대파트 임차인들의 구제지원을 펼치기도 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